

2024.04.30.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대기업 미디어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공공 영역의 해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윤석열 정부 3년차의 미디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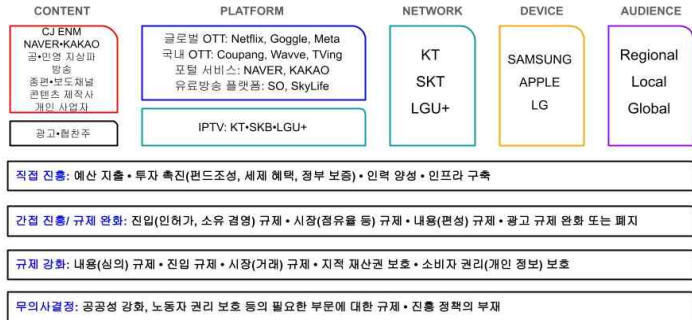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2024. 3. 14.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방안>

방송통신위원회

2024. 3. 2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 분석의 기본 틀



윤석열 정부 3년차 미디어 정책 주요 과제

주제/주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콘텐츠융합산업발전위
법제 개편 규제 완화	통합미디어법(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추진 주파수 및 서비스 효율화(구조조정)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소유 겸영 규제완화 편성 광고 규제 완화	인허가제 규제 완화 소유겸영 규제 완화 광고 규제 완화 중소·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광고 및 외주편성 규제 완화)
공정경쟁 체제수립	통신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	외주사, 창작자, 종사사 권리 보호
산업발전	OTT·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완화	K콘텐츠 수출 지원 콘텐츠 제작과 AI 기술 접목 지원
미디어공공성(?)	플랫폼(포털) 제휴평가위 공정성 강화 자율규제 및 팩트체크 강화 방송심의 제제 강화·반복 위반 제재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콘텐츠 영역: 직접 진흥

• 투자 촉진

□ 세제 혜택: 세액 공제율 확대

□ 투자 촉진

- 모태펀드에서 미디어전략펀드(모펀드+민간자금)
 - 정부재정 8백억원 + 민간자금 4천억원
 - 콘텐츠 IP 펀드 및 OTT 특화 제작지원(OTT 공동보유 의무)
-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 다각화
 - IPTV 3사의 iPICK을 통한 투자 유도 및 제작지원 연계

• 인프라 구축

□ IP 콘텐츠 관련 인프라

- IP 인프라 구축
 - 융복합 클러스터(고양), 수출거점(상암) 지원
 - IP 관련 펀드 확대 및 IP 지원 사업 강화

□ 첨단 제작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 버추얼 스튜디오,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역센터 확대

콘텐츠 영역: 직접 진흥

• 예산 지출

□ 제작 및 수출 보증

- 콘텐츠 IP 보증, 수출특화 보증, 완성보증, 이자 지원

□ AI 기술 활용

- 워크플로우 단계별 AI 기술 접목 강화
 - 생성형 AI 활용(각본, 영상 편집, 무인 중계 등)
 - 영상추천, 화질개선, 실시간 압축 전송 등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 한-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 지역 방송사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및 교류 협력 지원

• 예산 지출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EBS 중학프리미엄 및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 EBS, 지역·중소방송,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345억원)
 - 아리랑 국제방송, KBS 대외방송 제작·송출 지원(242억원)

콘텐츠 영역: 직접 진흥

• 평가

□ IP 보유 및 확보 가능한 대기업 지원 진흥 정책

- 영상 콘텐츠의 오리지널 IP 확보는 크리에이터 육성에서 시작하는 중장기 로드맵 필요
- OTT 콘텐츠의 다수가 웹툰 IP를 기반으로 함. 웹툰 IP의 다수 보유 사업자는 포털의 엔터 자회사들
- IPTV 3사의 공동콘텐츠 수급브랜드 iPIC을 통한 투자 유도
- IP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제작사 및 포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미디어전략펀드, 제작 및 수출 보증 등 지원

□ 인프라 지원 정책은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방?

- 융복합클러스터, 수출거점 등의 인프라 구축 지역은 기존 지역의 재활용

□ 공적 콘텐츠 지원은 제자리 걸음

-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과 중소·지역방송 제작 지원 모두 전년 대비 제자리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진입 규제 완화

□ 재허가(승인) 규제 완화

- 유료방송 재허가(승인)제 폐지
- 지상파·종편 유효기간 확대(5년→7년)
- 재허가(승인)시 부관 부과 원칙 사전 명시(기본계획)
 - 부관 부가 사유 공개

□ 소유·겸영 규제 완화

-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제한 GPD 일정 비율과 연동
- 일반PP, 홈쇼핑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 지상파방송간 겸영, 지상파-케이블 간 겸영 상한 완화
 - MBC는 제외

• 내용(편성) 규제 완화

□ 제작원·장르별 의무 편성 완화

- 1개국 수입물 및 오락물 편성 규제 폐지
-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완화
 - 지역M(20% 이상), 지역민방(3.2% 이상) 대상 완화

□ 중소 케이블TV 지원

- 한시 허용 중인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 제도화 추진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광고 규제 완화

□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제 완화

- 프로그램 내/외, 기타광고로 단순화
- 프로그램별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20% 이하) 제한 완화

□ 품목별 광고금지·제한 규제 완화

-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금지 단계적 완화
 - 조제유류,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등

□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검토

- 미디어랩사의 방송 연관 온라인 광고 결합판매 허용

• 광고 규제 완화

□ 타이틀 스폰서십 도입

-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사용 단계적 허용
 - 지역R 프로그램의 정부공공기관 제목협찬 우선 허용
- 일부 방송사만 해당되는 제작협찬 규제 폐지 검토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평가

□ 방송사업자의 규제완화 요구를 그대로 반영

- 재허가(승인)으로 규제해야 할 공적 책임 부여와 소유/경영 분리 원칙 폐기
- 유료기간 확대가 아닌 실효성있는 이행조건 점검 방안이 필요
- 사업평가 및 계획 심사 이전 부관 부가 조건 원칙 공개의 모순

□ 사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소유 겸영 규제 완화

- 사주의 지위재(관계재) 확보를 위한 방송 소유 방임
- 모기업의 경영상태 악화에 종속되는 방송사 지위 위험성 증가

콘텐츠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평가

□ 자체제작 비용 축소 허용

- 제작원 장르별 편성 규제 완화에 따른 구매물과 재방 비율 증가
- 중소·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동기 부여 축소

□ 미시적 광고규제 완화

- 수요측(광고주)보다 공급측(방송사) 중심의 뒤늦은 정책
- 방송광고시장 자체의 위축 대응 방안 부재
 -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의 난관: 방송사의 수수료 부담, 미디어렙 조직의 인터넷 광고 영업 역량 부재
- 타이틀십 스폰서 도입에 따른 협찬물 확대 및 제작 역량 축소 위험
-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 위헌 및 중소·지역방송 광고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 부재

콘텐츠 영역: 규제 강화

• 공정환경 조성 및 권리보호 강화

□ 외주제작사 및 종사자 관련

-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불공정행위 금지행위로 포함
- 방송사-외주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분쟁위원회 실효성 강화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노무 법률 관련 컨설팅

□ 방송채널 대가산정 합리화

- 유료방송플랫폼-PP 간 콘텐츠 사용료 관련 기준 마련
 - 산정기준: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 지급 총액 등
 - 선계약-후공급 원칙

• 내용 규제 강화

□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 현행 17개 심의규정 구체화
 - 주관적 해석, 모호한 규정의 조항 구체화
 - 매체별 등급분류 기준 조정

□ 방송의 공정성 심사 평가 강화

- 12월 KBS1DTV, MBC DTV 재허가 심사 적용
- 방송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등 공적책임 평가 강화
 - 위반시 감점 확대, 공정성 평가항목 추가 발굴
-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 제재 강화(하반기 심사)

콘텐츠 영역: 규제 강화

•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 수신료 징수제도 안착 지원

- 공영방송의 안정된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자원 마련
-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강화

□ 공적 책임 강화

-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협약제도
-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시 적극 검토 및 지원

콘텐츠 영역: 규제강화

• 평가

□ 반복되나 성과없는 공정환경 조성

- 방송사-외주사 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은 이행 실패 파악이 우선
- 약 3년 간 5기 방통위에서 시행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개 우선

□ 방송심의를 통한 내용 규제 강화

- 심의규정의 구체화와 공정성 객관성 평가 강화는 모순
- 하반기 재허가 사업자(KBS1TV, MBC) 대상 표적 심의 예고
- 방통위 자율규제 연구용역 결과 공개 필요

콘텐츠 영역: 규제강화

• 평가

□ 공영방송의 공적 자원 방안 부재

- 분리고지를 통한 수신료 자원 축소는 비가역적 자원 축소
- 정부 예산(기금)을 통한 자원은 정부 통제만 강화
- 유료방송 플랫폼 수신료에 통합 징수하는 방안 등 실행가능한 대안 준비 필요(22대 국회)
 - IPTV 3사의 방송통신결합판매로 인한 유료방송 월정액 수신료 축소
 - 유료방송 가입자의 공영방송 수신료 '이중 납부'라는 문제 제기에 합리적 징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플랫폼 영역: 직접 진흥

• 국내 OTT의 해외진출 다각화

□ OTT-콘텐츠 협력형 글로벌 진출 확대

- 국내 스마트TV 내장 FAST 채널에 국내 OTT 콘텐츠 제공
- ICT 진출 해외 거점 연계 활용
 - 현지 OTT·IPTV 간 계약, 스마트TV+OTT 결합형 진출 지원

□ 글로벌 홍보 및 유통 등 통합 지원

- 글로벌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 국내 OTT 해외 홍보: Global OTT Awards, 국제OTT포럼

• 미래 미디어 육성

□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육성

- 가상환경 3D 제작 공간(스튜디오 등) 구축
- 엔터테인먼트 방송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

□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 메타버스 유망 기업 및 미디어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영역: 간접 진흥/규제 완화

•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

□ 유료방송, 일반PP 시장 점유율 제한 폐지

○ 일반PP 전체매출 49% 이하 제한 폐지

○ SO, IPTV 전체 가입자수 1/3 제한 폐지

•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

□ 70개 채널운용 의무 폐지

○ 현행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는 사업자 채널 편성권 제약

○ 다양성 지역성은 사업자 자율 준수, 결과 공표

플랫폼 영역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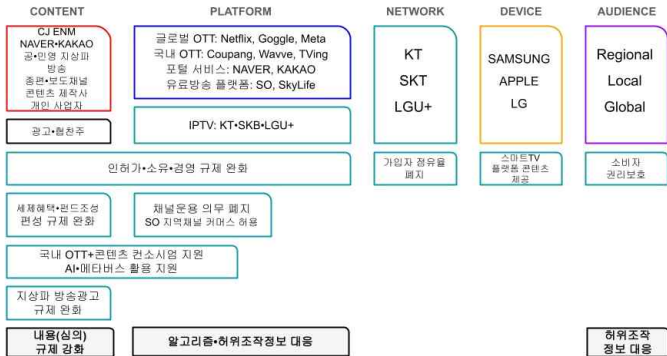
□ 통신3사의 무한 경쟁 허용

- IPTV의 전체 가입자수 제한 폐지는 딜라이브 인수, 방송통신결합판매 경쟁을 더욱 격화
- 채널 운용 의무 폐지는 IPTV 3사의 채널 편성권력을 더욱 강화
- 유료방송플랫폼-PP 간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 무력화
- 국내 미디어 시장 내 통신3사의 지배력 더욱 강화

□ 글로벌 콘텐츠 육성과 국내 OTT 육성 중 어디에 집중?

- IP 보유 가능 대기업과 자본력을 갖춘 통신3사에 대한 콘텐츠 지원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IP 독점 방지 및 국내 콘텐츠 편성 요구 등의 대응책 부재
-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국내 OTT에 대한 대책 부재: 글로벌 가입자 확대?
- 넷플릭스 망사용료 부과 관련 소송 등 글로벌 OTT 전략에 대한 분석 부재

윤석열 정부 3년차 미디어 정책의 기초



윤석열 정부 3년차 미디어 정책의 기초

- 통신3사가 주도하는 네트워크·플랫폼 사업에 필요한 규제 및 진흥 영역 콘텐츠로 확대
- IP 보유 네이버·카카오 플랫폼의 콘텐츠 지배력 강화 지원
-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대응 정책 없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K-콘텐츠 육성 전략
- 보도기능의 콘텐츠·플랫폼 부문에는 내용 규제 강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분산된 규율체제의 통합 계획 부재

미디어 대기업의 정책 로비에 포획된 규제체제

5기 방통위에서 진행한 시청각미디어법(가칭) 등 규제·진흥 및 각종 위원회의 재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감사합니다